

秋 굳히기 돌입...金·李 뒤집기 총력

더민주 전당대회 D-9...22일부터 투표 개시

추미애, 전국 지도도 우위 김상곤, 호남·재야 우군 이종걸 '反文카드' 공감대

차기 대선을 진두지휘할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을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민주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재외국민대의원 인터넷투표, 22일부터 25일까지 권리당원 ARS 투표, 24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 27일 전당대회 현장에서의 대의원 투표 등을 통해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일단 범주류 측의 지원을 얻은 추미애 후보는 전반적인 판세를 우세 국면으로 보고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호남과 지지단체 및 당내 혁신위·재야파를 우군으로 둔 김상곤 후보는 막판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 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비주류 표심을 결집 중인 이종걸 후보도 세를 모으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당권 주자 캠프에서는 막판 흐름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기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추 후보 측은 “호남과 영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강한 지지세가 형성돼 있다”며 “경륜과 인지도, 선명성 등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로 문제인” 당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동성을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호남과 재야 세력은 물론 전문 주류 측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상곤 카드가 호남의 민심을 회복하고 당의 혁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을 당내 주류 세력이 주목하고 있어 막판 지지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은 전체 결과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이뤄진다. 대의원 투표인단은 모두 1만 2000여명으로 7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당원과 일반시민, 권리당원 투표에서 접전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결국 대의원 투표가 당권의 향배

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당권 주자들은 대의원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지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의원 명부가 나오는 대로 성향을 파악, 지지 가능성이 높은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현장 투표에 참여, 지지해줄 것을 읍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결집력이 높은 친문 진영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판단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비주류와 호남표심이 과연 결집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형석·이게호·김춘진 호남 최고위원 누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가운데 호선하도록 한 호남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간을 나눠 교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간 합의 여부도 주목된다.

17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더민주 권역별 최고위원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뽑는다. 우선 시·도별로 위원장을 선출한 뒤 권역별로 모여 호선한다.

호남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인 이형석 광

주시당 위원장과 전남의 유일한 더민주 소속 재선인 이게호 전남도당 위원장, 3선 출신 원외인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이 논의해 선출하게 된다.

이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 이게호 위원장 등 원외 인사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3명이 기간을 나누서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석 위원장은 기간을 나누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만나서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단 한명의 현역 의원이 없는 만큼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아야 호남 민심을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며 “어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위원장과 최고위원은 합당 등 변수가 없는 한 내년 대선까지 호남에서 더민주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는다. 이들 3명의 위원장은 8·27 전당대회 전 만나 최고위원을 호선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강령 ‘노동자’ 복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둘러싼 내용이 17일 일일락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삭제해 추진했던 ‘노동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표현을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이번 일이 실무진에서 문구를 수정하다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의 정체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강령 개정과 관련, ‘노동자’ 문구 삭제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시민과 중산층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수정하기로 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표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주자 가운데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지금보다는 강경노선으로 당의 색깔이 바뀔 것이 유력한 만큼, 중도파와의 치열한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주 간 국방장관 험난한 귀갓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성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군청을 빠져나가며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오늘부터 ‘청문회 전쟁’

18·19일 인사 검증...‘서별관 회의’ 증인 채택 논란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청문회 정국’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책문화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양대 축으로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예상을 걸어 현장 투표에 참여, 지지해줄 것을 읍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결집력이 높은 친문 진영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판단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비주류와 호남표심이 과연 결집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 자금 지원을 주도했다는 게 두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 의원, 안 수석, 홍 전 행장의 증인채택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망신을 주고,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 증인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22일 추경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추경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연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참으로 한심스러운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맹비난했다.

전날에 이어 시도된 여야의 증인채택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파행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3당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 진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예결위는)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우병우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 조사와 관련해서도 각 부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감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3~25일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추경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물 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 사태와 관련, “물 대포가 불법이고 공권력 과잉이라고 분명히 판결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이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준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